



##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최영상 강영신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

금융/정책

##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2022. 08



- 
- 저 자 : 최영상 연구위원 (051-663-8172 / choiys@hf.go.kr)  
강영신 연구원 (051-663-8178 / 6094@hf.go.kr)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목 차

I. 지방침체문제 대응 및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	1
1. 지방침체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 .....	1
2. 지방침체문제에 대응한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	3
II. 지방침체의 다면적 양상 .....	6
1. (인구)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확대 및 인구감소 악순환 양상 .....	6
2. (주택도시) 비수도권 주택노후 및 빈집증가 양상 .....	13
3. (지역경제) GRDP 감소 및 노인부양비 증가 추세 .....	16
III. 지역침체 대응 국가 정책 사업 .....	19
1.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 .....	21
2. 지방소멸대응기금 .....	24
IV. 지방침체 대응 공공금융정책 해외사례 .....	26
1. 정부주도 지역투자 금융 .....	27
2. 협동조합 방식 지역개발 금융 .....	34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 금융 .....	38
4. 해외사례의 특징 및 장단점 .....	41
V. 지방침체에 대응한 공공금융정책 .....	44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기금 .....	45
2. 지자체주도 지역개발은행 .....	47
3. 지역침체 대응 특별 공공보증 .....	50
VI. 결론 .....	51
참고문헌 .....	53

## 요 약

- 지방침체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다른 이름으로 인구감소 가속화의 큰 축으로 작용하며, 지방침체문제 자체가 더욱 강력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출발점
  - 지방침체문제는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이며, 1) 지방 청년인구 유출, 2) 수도권의 심각한 저출산, 3) 지방소멸 가속화라는 전반적 인구감소 악순환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 지방침체가 복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나, 자금의 확보 및 금융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구·주택·도시 측면의 지방침체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신속한 정책대응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침체 대응하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공공금융정책 방안이 필요
  -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해외의 경우 낙후지역 금융지원을 위해 1) 정부주도형 지역개발기금 2) 협동조합방식 지역개발금융 3) 지자체 주도 공공개발은행 등 크게 3가지 형태의 공공금융정책이 진행 중
-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고려해 지방침체 대응을 위해 ‘정부주도형 지역재투자 금융지원’, ‘지자체 주도 지역공공개발은행’, ‘지역침체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지역침체 대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금융정책 외에도, 시장 참여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지원 및 정책지원이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금융 지원 및 공공특별보증과 더불어 컨설팅 및 연구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공급될 경우, 지역경제주체의 참여촉진 및 혁신적 지방침체 대응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 I. 지방침체문제 대응 및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 1. 지방침체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

- ▣ 지방침체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맞닿아 있으며, 해당문제는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힘
- 수도권 집중현상은 그 자체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지방 침체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어,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왔음
  -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균형 발전 및 지방침체문제 대응은 헌법적 가치\*임과 동시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대한민국 헌법 123조 :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를 먼저 겪으면서 수도 혹은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및 인프라, 재정,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이 정립
    -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형 국가인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통해 헌법 1조\*에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정부 권한과 재원의 대폭 강화, 대학 평준화 강화 등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프랑스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 ▣ 또한, 지방침체문제 및 수도권집중현상은 1) 지방 청년인구 유출, 2) 수도권의 심각한 저출산, 3) 지방소멸 가속화라는 '전반적 인구 감소 악순환'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 1990년대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마쓰다 히로야\*에 의해 지방소멸과 함께 진행되는 '전반적 인구감소 악순환'에 대한 위험성을 주장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 건설성(현 국토교통성) 출신으로 1995~2007년 이와테현 지사를 역임(3선)한 다음 2007~2008년 총무대신을 역임한 공무원이자 학자

- 지방소멸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자체가 소멸하고, 과밀화된 수도권 또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출발점을 의미
  - 마스다 히로야는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의 관점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이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큰 충격을 줌
-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그 어떤 국가도 경험한 적 없는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사회로 진입
- 우리나라는 20년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 악순환 현상에 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감소, 생산인구 감소, 노인인구 비중 확대의 속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음
- 서구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인구감소문제의 위험성을 인지해왔으며, 해당 문제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지해왔음
  - 칼 군나스 뮌르달은 1934년 ‘인구 문제의 위기(Crisis in the Population Question)’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는 스웨덴 및 유럽 국가들이 이를 방지할 경우 향후 심각한 국가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
    - 인구감소 및 노인인구 비중확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는 국방, 교육, 연금, 조세, 산업, 복지, 물가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 악영향이 예상
  -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수도권 집중방지 및 저출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지방침체문제를 방지할 경우, 인구감소 가속화와 더불어 지방침체 자체가 더욱 강력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또한 예상. 따라서 지방침체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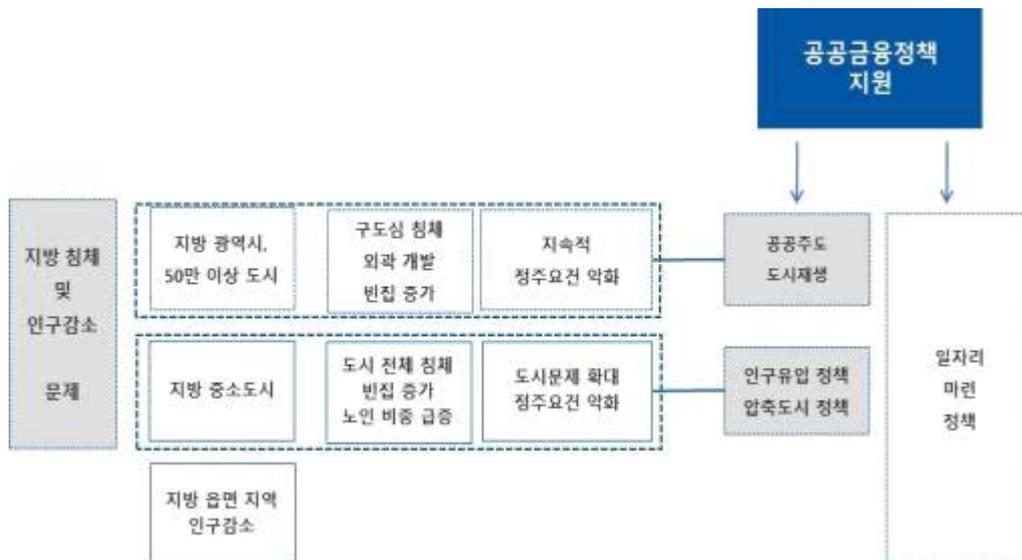
## 2. 지방침체문제에 대응한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 ▣ 지방침체는 다면적인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
- ▣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측면에서 1)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2)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이중적 위험에 직면
-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현 0.8 수준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총 인구 감소세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
- 여기에 더해 코로나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망자 증가, 혼인의향 및 혼인건수 감소, 출산 의향의 지속적 하락 등을 고려할 경우 인구 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 있음
-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또한, 주택·도시 측면에서 비수도권은 1) 주택노후화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 2) 빈집증가 등의 문제로 도시침체 가속화라는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상
- 빈집문제는 인구문제와 주택문제가 중첩된 특수한 도시 문제
-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고령인구 사망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 되므로 빈집이 크게 증가할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존재
- ① 전반적 인구감소 추세, ② 고령인구 중심의 1인 가구 증가, ③ 지방 지역 고령인구 비중 증대, ④ 지방지역의 인구유출 및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은 주택수요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향후 빈집 확대로 대표되는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도시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 즉 인구, 주택, 도시의 측면에서 지방침체문제는 현재의 예측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될 요인이 잠재적으로 존재
  - 지방의 경우 인구가 줄고 노후주택 및 빈집이 많아지면 정주여건의 악화로 지방침체의 악순환이 강화될 가능성이 증대
  - 인구, 주택·도시, 지역경제 3방면의 문제점은 현재의 예측보다 문제가 가속화될 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빈집문제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임
  - 각각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 지방의 인구, 주택, 도시 문제의 연결고리는 지방침체문제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므로 종합적 정책 대응 필요
  
- ▣ 지방침체문제는 지방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양상으로 진행, 해당 문제의 완화에는 막대한 자금과 금융지원이 필요함
  - 지방 대도시(인구 50만 이상)는 구도심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당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필요
  -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인구 유출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노령인구 비중 증가 및 빈집증가로 도시전체가 침체문제에 직면
    - 지방 중소도시 침체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 정책 및 콤팩트 시티 등 예산효율성 제고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지역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다양한 아이디어개발과 지역중심 기업창업, 기업유치 등이 필요
  
- ▣ 이러한 지방침체 완화 방안은 민간영역의 자발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며, 공공주도의 금융지원정책이 필요
  - 현행 정책 또한 정주여건의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나눠 볼 경우 지원 금액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중심적인 금융지원 및 자금지원은 부족한 상황

- ▣ 지방침체지역의 경우 문제완화를 위한 대응노력이 시급함에도, 대응주체인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하고 외부투자 유인 또한 부족
- 지방침체 특성상 지역의 경제상황,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경우 해당지역 지역민 스스로 지역경제침체 및 도시침체에 대응해야 함
- 지방 대도시 구도심의 경우 사업성이 높을 경우 도시재생 및 재개발·재건축의 대상이 되지만, 입지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경우 외부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지방 대도시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대다수의 거주민이 자금 여력이 현저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인구감소 확대 및 도시 전체 침체로 인해 도시재정비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외부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 따라서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해 지역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지역개발 공공금융정책이 필요

<그림 1> 지방침체와 공공금융정책 지원



※ 저자 작성

## II. 지방침체의 다면적 양상

- ▣ 우리나라의 지방침체는 1) 인구감소 2) 도시침체 3) 지역경제 후퇴 등 3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지방침체문제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일자리 감소, 도시낙후, 주택 노후, 빈집증가, 지역경제 후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진행 중
- 지방침체에 관한 대부분 정책은 각각의 영역만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현재의 전반적인 지방침체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어려움
- 각 분야의 문제점들은 병행적으로 진행되므로 전반적 지방침체의 양상을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 지방침체문제대응을 위해서 먼저 지방침체의 다양하고 중첩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장에서 인구, 도시주택,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지방침체의 양상에 대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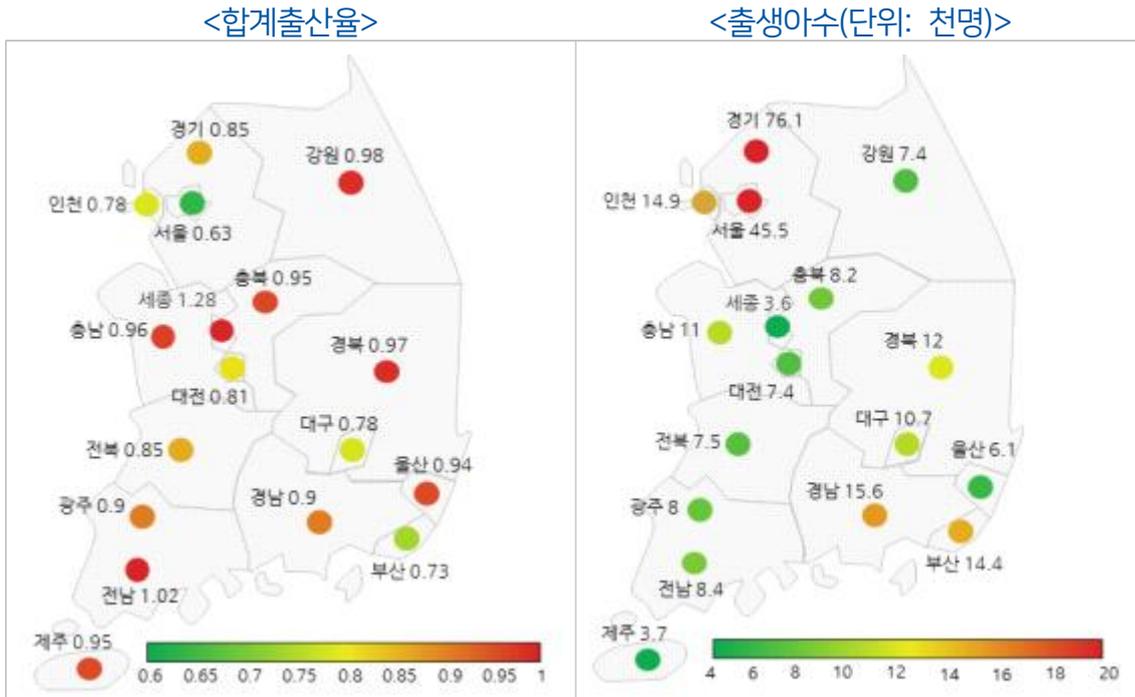
### 1. (인구)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확대 및 인구감소 악순환 양상

- ▣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대칭적 양상을 보임. 또한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수도권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 중

####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비대칭적 양상

- ▣ 비수도권의 출산율은 수도권에 비해 높은 편이나 청년인구 자체가 적어 비교적 높은 출산율에 비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적음
- 2021년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의 출산율은 0.63으로 가장 낮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그림 2>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21년)



※ 자료 : 통계청

- ▶ 비수도권의 경우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청년인구의 부족으로 현저하게 낮은 출생아 규모를 보이고 있음
- ▶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 하위지역과 비수도권 상위지역을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남
- 수도권의 출산율 최하위 지역은 서울 관악구로 출산율은 0.44이나 출생아 수는 1,700명 수준
-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출산율 상위지역인 전남 영광군은 1.87의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400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임

<표 1> 2021년 합계출산율 수도권 하위지역 및 비수도권 상위지역 비교

<수도권 출산율 하위>			<비수도권 출산율 상위>		
지역	출생아 수(천명)	합계출산율	지역	출생아 수(천명)	합계출산율
서울 관악구	1.7	0.44	전남 영광군	0.4	1.87
서울 강남구	2.2	0.52	전북 임실군	0.2	1.81
서울 종로구	0.5	0.53	전북 진안군	0.1	1.56
서울 광진구	1.5	0.53	강원 양구군	0.2	1.52

※ 자료 : 통계청

- ▣ 즉, 수도권 출산율 급락과 더불어, 비수도권은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인구감소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음
- ▣ 2021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로 합계출산율은 0.38명이며 약 100명이 태어났고, 다음은 서울 관악구, 대구 서구로, 상위 3개 지역은 출산율이 0.5 이하로 나타남
- ▣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 구도심 또한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심각한 저출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20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합계출산율 상하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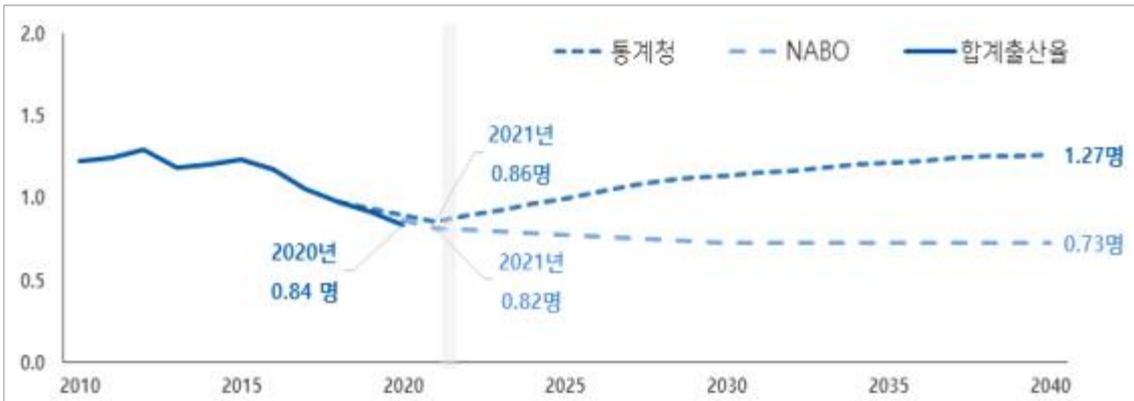
<2021년 출산율 하위 지자체>			<2021년 출산율 상위 지자체>		
지역	출생아 수(천명)	합계출산율	지역	출생아 수(천명)	합계출산율
부산 중구	0.1	0.38	전남 영광군	0.4	1.87
서울 관악구	1.7	0.44	전북 임실군	0.2	1.81
대구 서구	0.4	0.47	전북 진안군	0.1	1.56
서울 강남구	2.2	0.52	강원 양구군	0.2	1.52

※ 자료 : 통계청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대칭적인 인구감소 악순환 현상은 결국 전국 단위의 합계출산율 하락 및 총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 ▣ (출산율 지속하락)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출생아 수 급감 중. 2021년 출생아 수 26만 기록,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 1970년대 4.5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1.0 미만으로 떨어져 0.84를 기록
- 2017년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분석은 2019년 합계출산율을 0.95로 추정, 그러나 2019년 실제 출산율은 0.92를 기록, 2020년에는 0.84로 하락

- 과거 장기 추정 출산율은 약 1.27이었으나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장기 출산율 전망치를 0.73으로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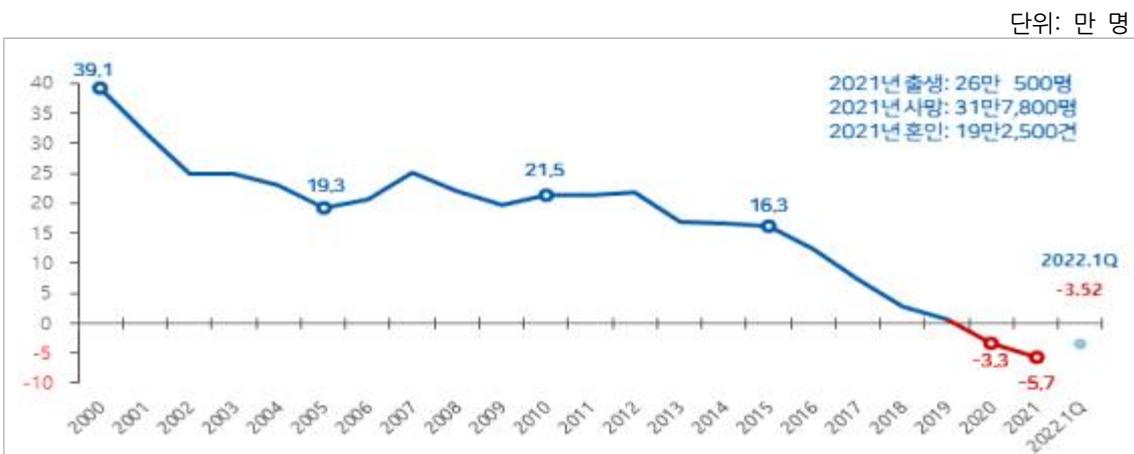
<그림 3>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 출처: 통계청, 김경수·김상미(2021)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경제현안분석 제 100호, 국회예산정책처

- ▣ (총인구 감소) 최근 2년 연속 총인구 감소에 돌입. 2020년 총인구 3.26만 명 감소에 이어 2021년에는 5.73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출생자 잠정치는 26만 500명으로 통계집계 이래 최저수준을 보였으며, 최초로 26만 명 대 진입
- 2021년 사망자 잠정치는 31만 7,800명으로 통계집계 이래 최대수준, 이로 인해 총인구 감소폭이 2020년에 비해 약 2.5만 명 증가

<그림 4> 인구 자연 증감 추이



※ 통계청

## 2) 비수도권 인구유출 및 감소 추세 확대

- ▣ (지방 인구유출) 현재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소멸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장기적으로 진행 중
  - 순이동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대 비수도권 유입인구가 소폭 증가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수도권의 유출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상황

<그림 5> 순이동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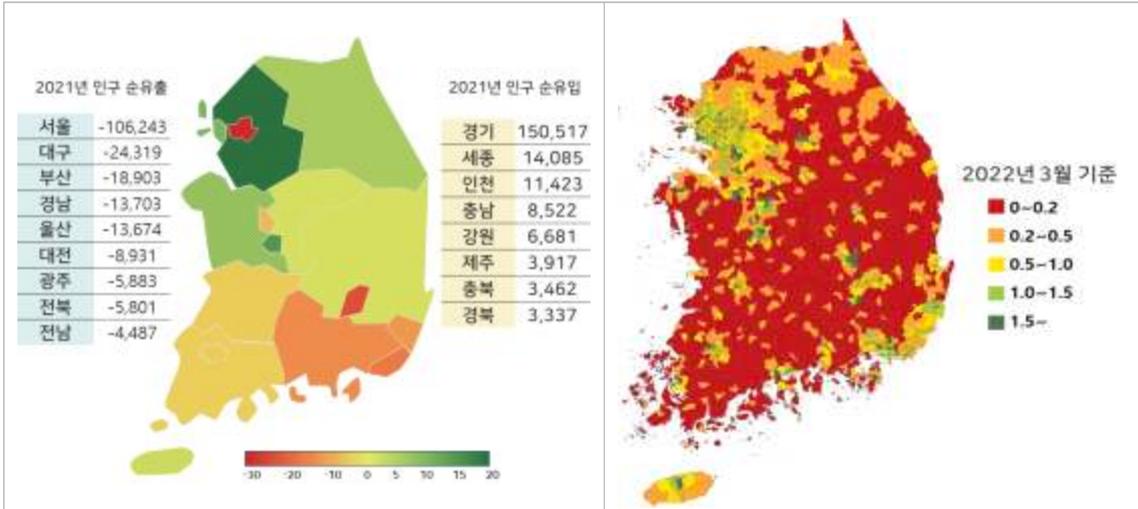
※ 통계청(인구이동)

- 2021년 경기, 세종, 인천 등의 지역은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대구, 부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출되어 인구 감소 중
- 지방지역의 인구감소를 보여주는 지방소멸 지표 또한 빠르게 진행. 출산율 하락,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그림 6> 지역 인구 이동 및 소멸위험

<2021년 인구이동>

<지역소멸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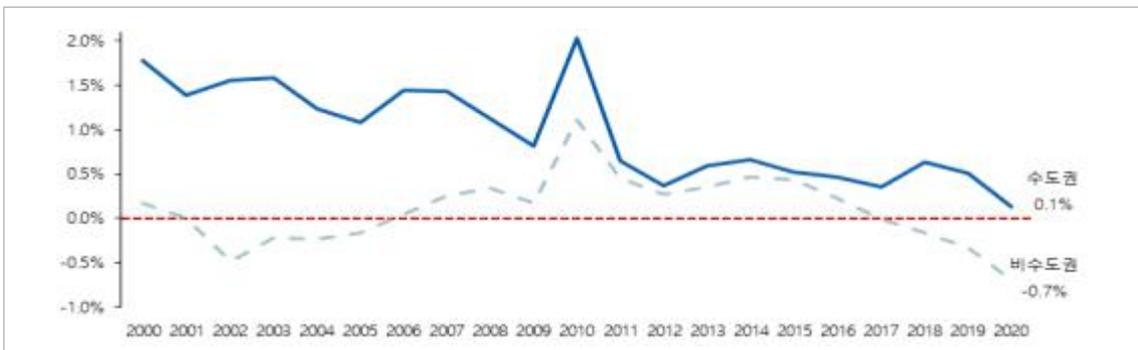
※ 통계청(인구이동), 고령정보원(지역소멸위험지수, 읍면동 기준)

▣ (비수도권 인구감소 하락세 확대) 인구증가율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며, 비수도권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

\* 인구증가율은 출생·사망인구, 이동인구 및 외국인까지 고려되어 지역의 인구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자연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의 합을 나타내며, {(당해년 총인구-전년 총인구)÷전년 총인구} x100로 산출

-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2018년 0.6%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며 2020년 기준 0.1%를 기록
- 비수도권은 2014년 0.5%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7년 0%에 돌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0.7%를 기록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인구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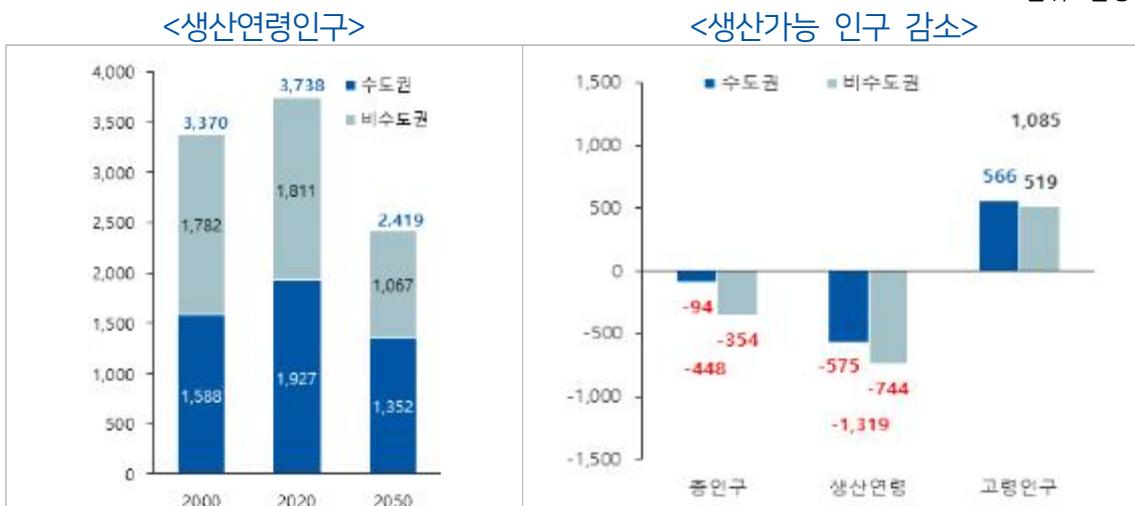


※ 통계청

- (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추세) 중위추계로 가정할 경우 2050년 총인구는 2020년 대비 448만 명 감소한 4,736만 명으로 전망
- 국내 총인구는 2000년 4,701만명에서 2020년 5,184명으로 483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인구의 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88.5%, 비수도권이 11.5%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인구가 증가함
-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에 비하여 비수도권 인구가 21만명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2050년에 더욱더 심화되어 비수도권 인구는 수도권 대비 281만명 더 적어질 것으로 전망
- 전국적으로 2050년까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더 크게 감소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나 비수도권의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총인구감소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수도권의 생산연령인구는 575만명 감소하고, 고령층은 566만명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생산연령인구가 744만명 감소하고 고령층이 519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2020~2050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추이

단위: 만명



※ 출처: 통계청(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주)중위추계(기본추계), 즉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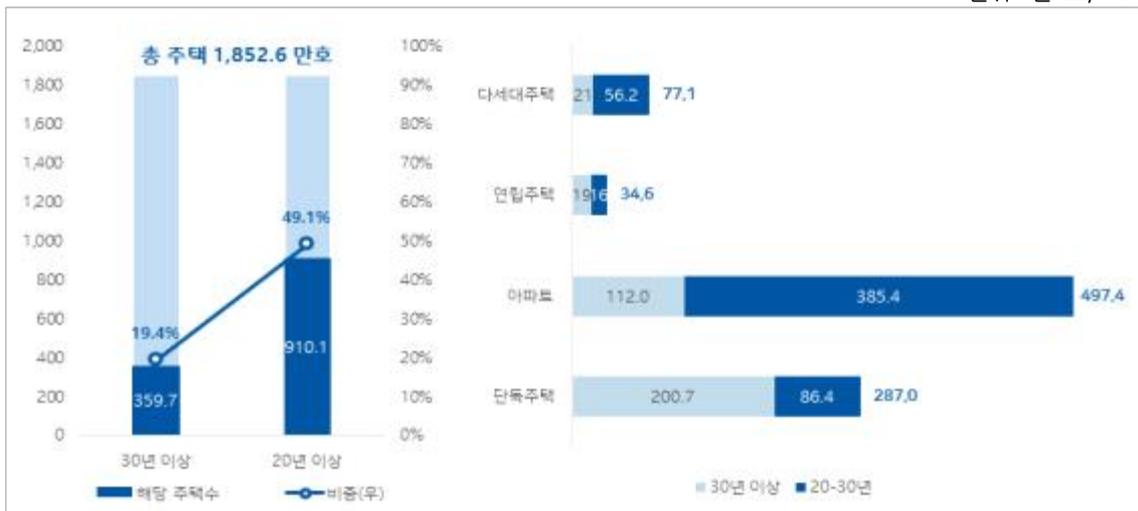
## 2. (주택도시) 비수도권 주택노후 및 빈집증가 양상

### 1) 비수도권 주택 노후화 가속

- ▣ (노후주택 증가세) 전반적 주택 노후화 진행 중. 2020년 기준 노후주택은 약 19.4%, 그러나 10년 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전국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20년 기준으로 19.4% 수준이나, 10년 후 20년 이상 주택들이 그대로 노후화 될 경우 49.1% 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유형별로 볼 경우 단독주택은 노후주택 비중은 높으나 총량은 작으며, 아파트는 비중은 다소 낮으나 총량이 큰 편으로 유형별로 노후 양상이 다름
- 특히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은 70-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 수백만 호가 대량으로 공급, 이로 인해 주택 노후화도 한꺼번에 진행

<그림 9> 2020년 노후주택 비중

단위: 만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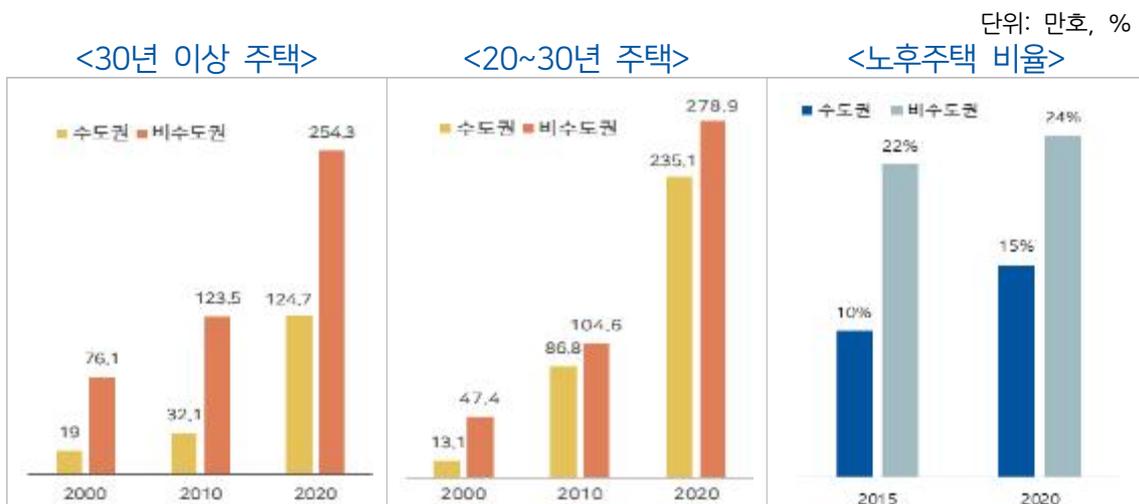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주택총조사

- ▣ (비수도권 노후주택) 주택노후화의 노후화 양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격차가 큰 비대칭적 양상을 가지며 노후주택의 경우 향후 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의 확대가 예상됨
- 2020년 기준 노후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약 130만호 이상 차이가 나며, 20~30년 준공 주택은 약 43만호 이상 차이가 남

- 수도권외의 경우 신도시를 통한 신규주택공급 및 노후주택 멸실 후 재건축 등으로 인해 노후주택의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인구문제 등으로 노후주택의 재공급 유인이 낮아, 향후 노후주택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노후주택 비율을 비교할 경우 2020년 기준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4%로 비수도권은 주택 4채 중 1채가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노후주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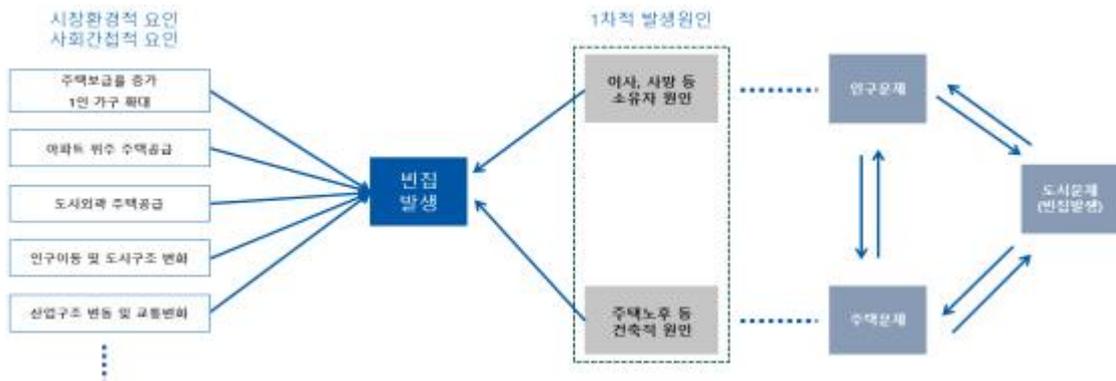
※ 출처: 국토교통부

※ 주)노후주택비율(%)=(30년 이상 된 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 2) 빈집 증가로 인한 지방도시 침체 가속

- ▣ (빈집문제의 복합성) 빈집은 인구문제와 주택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문제로 지방침체문제의 가장 중요한 도시문제의 큰 축
- 빈집문제는 주택시장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 간접적 요인, 주택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
- 그러나 빈집의 1차적 발생원인은 소유자 본인의 문제와 주택 노후화 등 건축물 자체의 문제로 이는 인구문제 및 주택문제와 연결됨
- 따라서 빈집문제는 인구문제와 주택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도시문제로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문제가 확산 중

<그림 11> 빈집 발생원인



※ 저자작성

- ▣ (지방 빈집 증가 예상) 노령인구가 많은 지방의 경우 노령인구 사망으로 빈집 증가세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큼
- 빈집 또한 1995년 전국 36만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00만호를 넘어선 이후, 2020년 151만호 이상을 기록
- 지방의 경우 고령인구 사망 시 노후주택 대부분이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보다 증가추세가 가속화 될 여지가 큼
-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수요 감소, 사망자 확대, 노후주택 증가가 맞물려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빈집확대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수도권, 비수도권 빈집 비중은 권역별로 구분해서 볼 경우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며 8개도의 경우 주택 8채 중 1채가 빈 집
- 5대광역시의 경우에도 서울, 경인지역에 비해 빈집 비중이 높은 편이나 8개도의 경우 2020년 기준 서울보다 4배, 경인지역보다는 2.1배 높게 나타남

<그림 12> 사망자와 빈집 증가 추이



※ 자료 : 통계청

### 3. (지역경제) GRDP 감소 및 노인부양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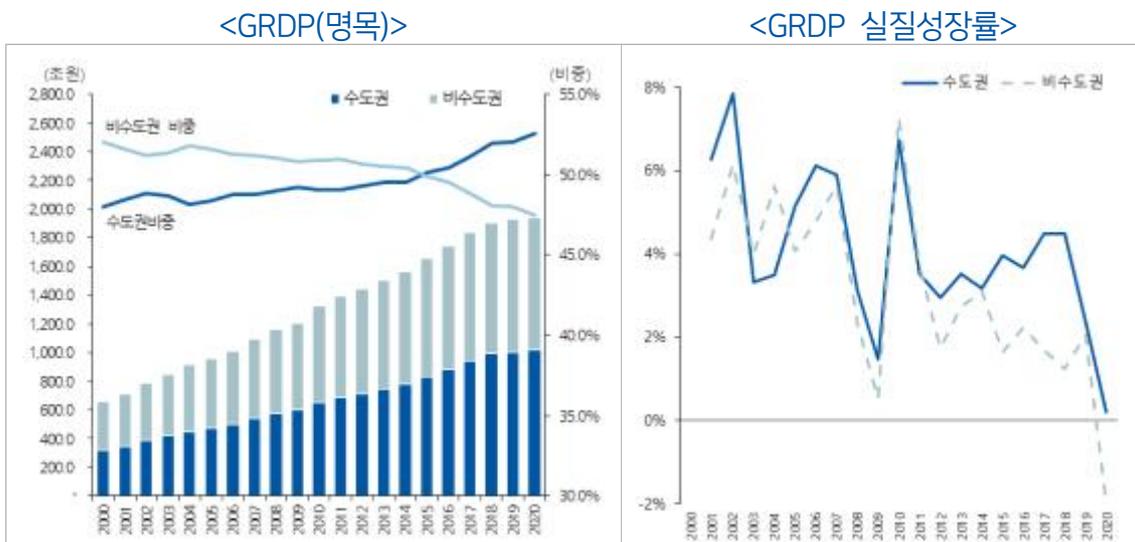
▣ 비수도권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노인 부양비 증가가 예상됨. 즉 경기침체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진행

▣ (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 2020년 수도권 GRDP는 전년보다 13.7조 증가한 1,017조. 비수도권은 동기간 5조 감소하여 919조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시도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지역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의 측면이나 경제주체간의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음

- 2020년 GRDP(명목)는 1,936조원으로 전년 대비 8.6조원(0.4%)로 증가세
- 2020년 GRDP 실질성장률은 수도권이 0.2%, 비수도권이 -2.0%로 수도권은 2018년 이후, 비수도권은 2016년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
- 전국 대비 수도권 GRDP 비중은 2015년 처음으로 50%를 넘겼으며 2020년에는 52.5%를 기록하여 수도권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수도권 GRDP 성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높게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GRDP 집중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3>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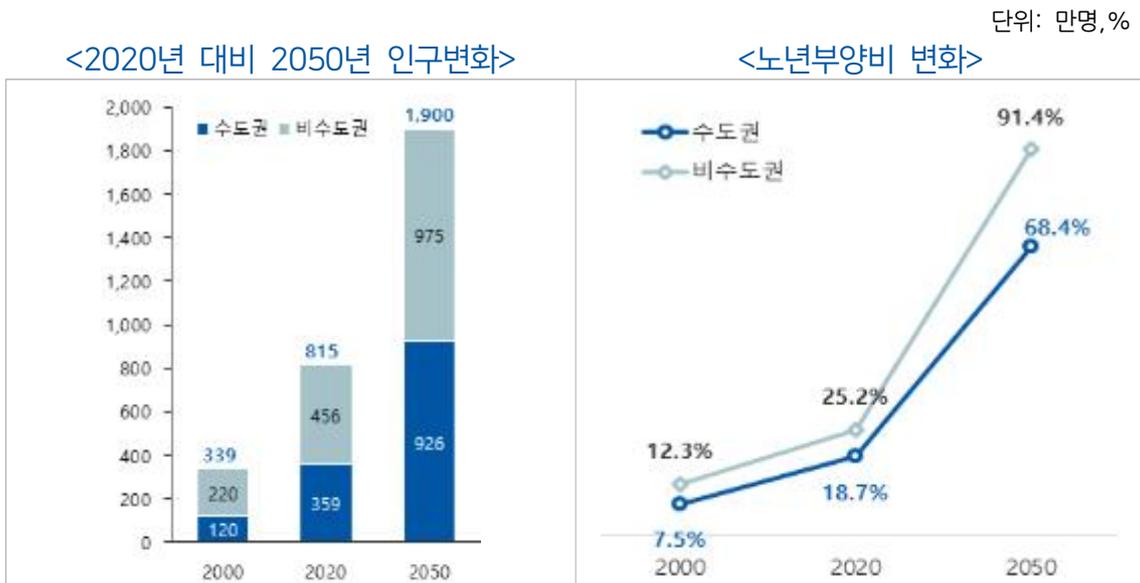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 ▶ **(비수도권 노년부양비 확대 추세) 생산연령인구의 고령인구 부담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비수도권 인구의 추가적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100으로 산출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연령인구의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됨

- 수도권의 노년부양비가 2000년 7.5%에서 2020년 기준 18.7%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50년에는 6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비수도권은 2000년 12.3%로 이미 수도권보다 높은 수치이며, 2020년에는 25.2%를 기록하였고, 2050년에는 9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비수도권의 고령층 부양 부담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

<그림 14> 인구 및 부양비 변화



※ 출처: 통계청(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주)중위추계(기본추계), 즉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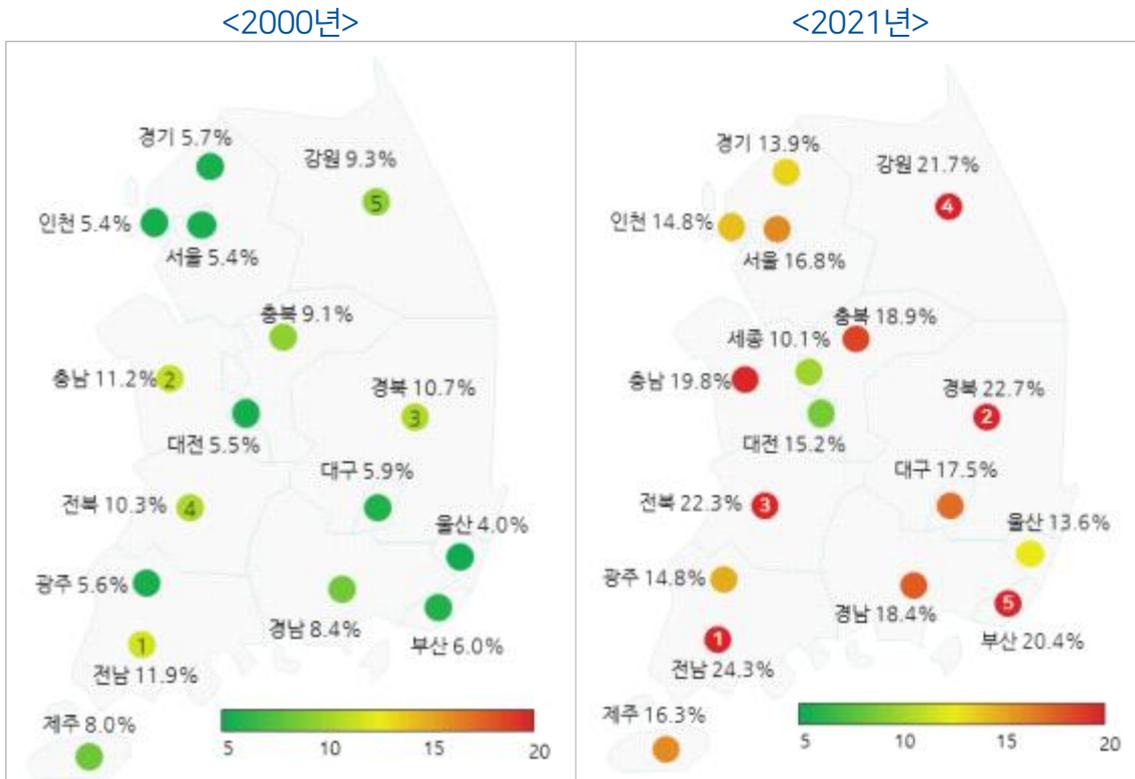
- ▶ **향후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수도권의 노년부양비 부담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지역 자금 여력은 더욱 축소될 것**
- 2000년과 2021년의 권역별,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을 비교해보면 과거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이던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구의 고령인구 비중 상승이 도드라짐

<표 3> 권역별 고령인구 비중

지역	2000년	2021년
수도권	5.5%	15.0%
5대광역시+세종	5.7%	17.0%
8개도	10.0%	20.7%
부산	6.0%	20.4%

<그림 15>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자료 : 통계청

### III. 지역침체 대응 국가 정책 사업

- ▣ 지역침체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은 크게 1) 인구감소지역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과 2022년 도입된 2)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구분
- 정부에서는 2021.11월 새로운 지역 성장 및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하여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제시
  -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은 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활성화와 ②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감소지역 지원 강화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본 보고서의 지역침체 대응 국가 정책 사업은 ②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감소지역 지원 강화에 해당
- 범정부 협업 사업은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각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크게 ① 일자리정책 ② 정주여건 개선 ③ 입주여건 확대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짐
  - 각 부처에서 기존 시행중이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 중 지역침체·소멸 대응과 관련된 50개 사업을 부처협업과제(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로 묶어 인구감소지역에 우대하는 방식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22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년에 약 1조의 예산을 10년간 지원하는 것
- ▣ 범정부 협업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성격이 강하며, 기금 사업은 지자체 중심적 자금지원의 성격이 두드러짐
- ▣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그 외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법제화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 (지역재투자)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유도를 위하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5개 은행과 12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행 중

- 평가항목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정량평가는 금감원, 정성평가는 지자체 추천위원이 결과를 산정하며, 민간위원장·금융위·행안부·금감원·금융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결과를 확정함
  - 정량평가: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인프라 투자
  - 정성평가: 지역금융 지원전략

&lt;표 4&gt; 지역재투자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은행	저축은행
1. 지역자금 역외유출 (40/50)	①지역별 예대율 ▶ 전년 대비 개선수준(가점)	15 (+1)	25 (+1)
	②지역경제 대비 여신과리율 ▶ 지역경제 대비 기업여신과리율	20 (10)	20 (-)
	③지역 여신 증가율	5	5
2. 중소기업지원 (25/20)	①지역별 중기대출/총 여신 ▶ 중기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가점)	15 (+0.4) (+1.0)	10 (+0.5) (+0.2)
	②지역별 중기 경제기여도 대비 중기대출 과리율	5	5
	③지역 중기대출 증가율	5	5
3. 서민대출 지원(15/20)	①지역별 서민대출/가계대출 ▶ 서민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10 (+0.4)	15 (+0.6)
	②서민대출 증가율	5	5
4. 인프라 투자 (10)	①인구 천명당 점포수 ▶ 점포 신설 (가점) ▶ 점포 폐쇄 (감점)	5 (+0.2) ( $\Delta 0.2 \sim \Delta 1.0$ )	/
	②인구 천명당 자동화기기 수 ▶ 자동화기기 신설 (가점)	5 (+0.1)	
5. 지역금융 지원전략 (10)	①해당 지역 경제기여도	2	4.5
	②지역기업·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금융환경 기여도	2.5	-
	③지역 서민 금융환경 기여도	2.5	3.5
	④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2.5	1.5
	⑤기타 지역금융 지원전략	0.5	0.5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8.20.)2021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고향사랑 기부금)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

## 1.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

- ▣ 12개 부처에서 기존 운용하던 국고보조사업 중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합한 50개 분야의 사업을 인구감소지역에 우대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공모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의 일정량을 할당하는 등의 실질적 혜택을 지원
-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2,030억 원이 증가한(8.6%) 2조 5,600억 원이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가장 많음
  - 개별 사업 별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8,630억 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5,236억 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396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부처별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4.8	20.1	5.3	35.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1,710.0	2,040.0	330.0	19.3%
	소 계	1,724.8	2,060.1	335.3	19.4%
농림축산 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유치지원	125.8	141.4	15.6	12.4%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정보화	1.0	76.2	75.2	75200%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농촌교육문화복지	19.0	17.5	-1.5	-7.9%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35.4	389.0	53.6	16.0%
	농촌보육여건개선	23.6	40.8	17.3	73.3%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지원-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37.9	82.0	44.2	116.7%
	소 계	542.6	746.9	204.4	37.7%
해양 수산부	어촌뉴딜	5,219.5	5,235.7	16.2	0.3%
	청년 어촌 정착지원	15.6	17.1	1.5	9.7%
	수산 공익 직불제	514.8	558.7	43.9	8.5%
	어촌 활력 기반 구축	84.4	85.3	0.8	1.0%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120.0	143.1	23.1	19.2%
	어업인 삶의 질 향상	38.0	27.0	-11.0	-28.9%
	천일염산업 육성	95.7	83.7	-12.0	-12.5%
	해양관광 육성	480.9	567.0	86.1	17.9%
	귀어귀촌 활성화	40.6	49.5	9.0	22.1%
	소 계	6,609.5	6,767.1	157.7	2.4%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단위: 억원, %			
행정 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50.0	2,396.1	46.1	2.0%
		지역발전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선도모델 발굴 및 확산	0.0	30.0	30.0	순증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6.9	8.9	2.0	29.0%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5.0	17.5	2.5	16.7%
	주민참여 지역 문제 해결 확산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76.5	38.0	-38.6	-50.4%
		지역거점형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102.0	122.0	20.0	19.6%
		과학기술기반 현안해결	10.8	15.8	5.0	46.3%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14.0	14.0	0.0	0.0%
		마을기업육성(사업비 지원)	64.5	64.5	0.0	0.0%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21.7	38.2	16.5	76.0%
		접경권 발전지원-접경지역 LPG 인프라 구축	0.0	60.0	60.0	순증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	0.0	61.7	61.7	순증
	소 계	2,661.4	2,866.7	205.3	7.7%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	지역특화 산업육성	시군구연고사업 육성	162.9	152.9	-10.0	-6.1%
		주력산업기업 지원	244.9	228.1	-16.8	-6.9%
		지역혁신 바우처	178.1	167.6	-10.5	-5.9%
		지역스타기업 육성	125.2	118.2	-7.0	-5.6%
		수출새싹 기업 육성	27.3	70.4	43.1	157.9%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88.0	69.0	-19.0	-21.6%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400.0	400.0	0.0	0.0%	
	소 계	1,226.4	1,206.2	-20.2	-1.6%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활성화기반구축-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20.0	80.0	60.0	300.0%
		문화도시 조성(제주 포함)	184.0	274.0	90.0	48.9%
		지역문화 진흥-생활문화 활성화	14.0	60.0	46.0	328.6%
		국민문화활동지원-문화가 있는 날	19.0	13.0	-6.0	-31.6%
		체육,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생활문화 공동체	13.0	13.6	0.6	4.6%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또바기 체육돌봄	10.3	10.0	-0.3	-2.9%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관광거점도시	383.0	330.8	-52.2	-13.6%
	소 계	643.3	781.4	138.1	21.5%	
법무부		출입국정보 시스템 운영-소멸지역 거주 외국인을 위 한 비대면 쌍방향 e러닝시스템 구축	0.0	1.8	1.8	순증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운영-소멸위기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공	49.9	49.2	-0.8	-1.5%
		소 계	49.9	51.0	1.1	2.1%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투자촉진	1,864.5	1,871.3	6.8	0.4%
보건복지부		의료 및 분만취약지	173.3	168.9	-4.4	-2.5%
산림청		소읍지역 실외정원	20.0	100.0	80.0	400.0%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330.3	350.4	20.1	6.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7,724.0	8,630.0	906.0	11.7%

※ 자료 : 국회정책예산처, 2022 정부예산안 분석보고서

- ▣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각 사업 내용의 분야에 따라 일자리·경제, 입주·정착, 공동체 활력제고, 정주여건, 기반조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6> 분야별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현황

분야	주요 사업 내용	2021	2022	증감액	증감률
일자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2.6만 명)</li> <li>먹거리 마중물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li> </ul>	8,279	8,784	505	6.1%
입주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의 지역살이 기회 제공(청년마을 연 12개소)</li> <li>귀농 귀어 컨설팅(191억원)</li> </ul>	1,109	1,194	85	7.7%
공동체 활력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협력공간 조성(122억원)</li> <li>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li> </ul>	589	700	111	18.8%
정주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8,630억원)</li> <li>접경 섬지역 LPG 인프라(122억원)</li> <li>문화취약지역 활력제고 프로그램(46억원)</li> </ul>	13,553	14,785	1,232	9.1%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계획수립 역량강화(20억원)</li> <li>귀농귀촌 통합플랫폼</li> </ul>	40	138	98	245.0%

※ 자료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보도자료(2021.11.23.)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 ▣ 지역침체 대응 정책을 광범위하게 구분하면 신규 인구 유입 및 기존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관련 정책과 정주여건이나 지역 적응 등의 거주 관련 지원 정책으로 양분됨

## 2.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신설됨

● (개요)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한 기금으로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

● (목적)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지역의 특화사업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

● (지원 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22개 지자체로, 이중 광역단체 15개, 기초단체 107개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하여 지정하며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20% 내외를 관심지역이라고 함

- 인구감소지수: 연평균 인구 증감율,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율, 재정자립도를 측정하여 산출

- 2022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규모) 전국에 연 1조원\*을 지원하며, 향후 10년간 지원(기초 75%, 광역25%)

\* 2022년은 시행 첫해로 7500억을 지원함

●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을 구성·운영

●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지자체는 2022년 기준 최대 120억(2023년 160억)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60억(2023년 80.1억)씩 지원될 것으로 나타남

● 관심지역의 경우 최대 30억(2023년 40억)이 지원되며, 평균 15.6억(2023년 20.8억)이 지원됨

&lt;표 7&gt; 기초지원계정 자원 배분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	
	95%		5%	
배분규모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5,343.75억	7,125억	281.25억	375억
최대한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120억	160억	30억	40억
평균	60억	80.1억	15.6억	20.8억

※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주) 최대한도는 배분규모/지역수로 산출한 평균액의 200%로 설정됨

- 광역지원계정 자원의 90%는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며, 나머지 10%는 재정·인구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생활권의 공동시설 설치 등)이나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단위 프로젝트(공동브랜드 육성 등)등과 인구감소 지역 직접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인구감소지역에 직·간접적으로 90% 이상의 자원이 지원되어야 함

&lt;표 8&gt; 광역지원계정 자원 배분

년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2022	378	363	258	240	223	180	119	25	23	14	14	12	9	9	4
2023	505	485	345	320	297	240	159	35	32	19	19	16	13	13	5

※ 자료 : 내부자료

※ 주) 서울, 세종은 배분액 없음

- (운용)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나 기금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부장관이 결정

## IV. 지방침체 대응 공공금융정책 해외사례

- ▣ 한국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방식의 관계형 금융이 점차 축소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지역별 금융격차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양상
- 지방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역 간 금융격차 확대는 침체의 악순환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함
- ▣ 도시화, 지방자치, 관계형 금융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의 경우 낙후 지역에 대한 관심의 역사도 오래되어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 금융 지원정책이 있어왔음
- 그 유형은 크게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금융 2) 협동조합 방식 지역개발 금융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금융 세 가지로 나뉨
- ▣ 우리나라의 지역 관계형 금융은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통칭되는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은 전통적 의미의 관계형 금융 정체성이 희미해진 상태라고 평가됨(최진배, 강다연)
- 농·축·수협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구분되며 금융지주에서 금융 기능을 담당하나 일반 상업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편
  - 농·축·수협 및 새마을 금고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하향식으로 조직됨
- 신협 또한 IMF 경제위기 당시 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약 500여개의 신협이 파산하거나 통폐합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정체성이 크게 흔들림
  - 한국의 신협은 민간 주도로 세워진 협동조합 금융이나 무리한 성장 및 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이후, 정부가 개입해 통제와 관리를 받으며 협동조합 금융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부분 희석된 것으로 평가

## 1. 정부주도 지역투자 금융

- ▣ 정부주도 지역투자 금융은 중앙정부의 재무부가 재원을 마련해 지역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미국)과 휴면예금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협력하는 금융지원정책(영국, 일본)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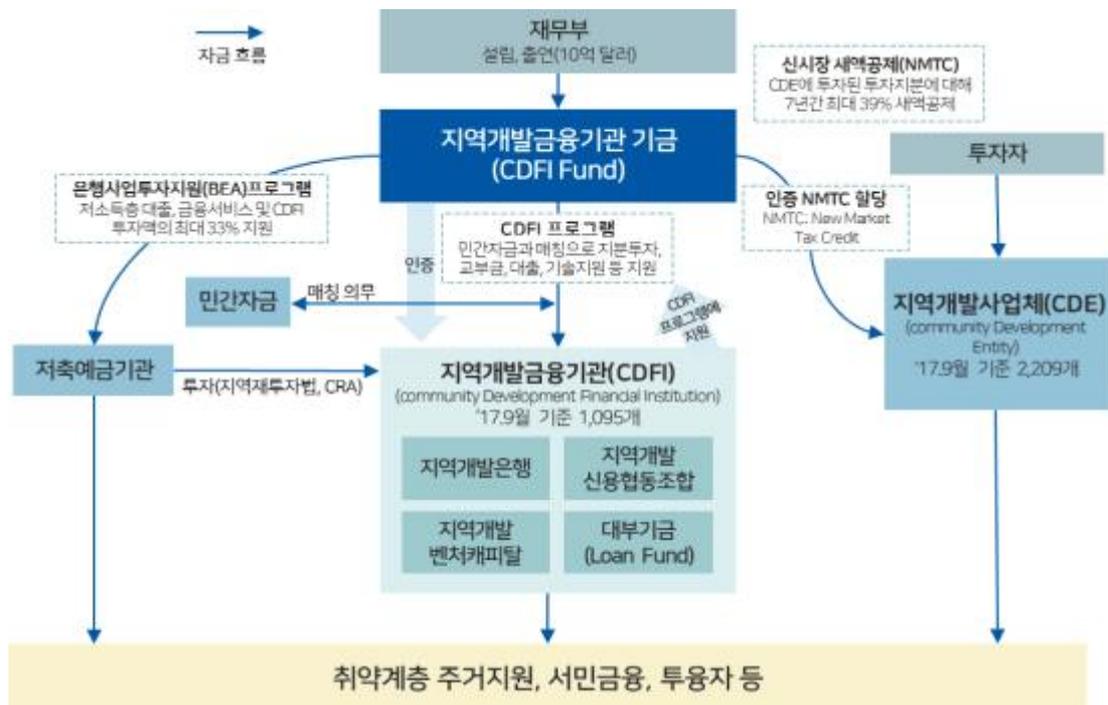
### 1)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 Fund)

- ▣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투자금융은 지역금융개발기구(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CDFI)인데 이는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음

- 1934년 주택부족문제에 직면한 미국은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해 연방 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하 FHA)을 설립, 정부보증 모기지 대출정책을 진행
- 그러나 FHA의 보증공급이 인종 및 지역평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백인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보증이 집중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유색인종 및 낙후 지역의 경우 FHA의 보증대출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재정 활용의 차별적 경향이 문제로 부상
-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美 의회 내에 정부주도 신용공급에 있어 인종, 종교, 국적,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
-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 제정
- ▣ 지역재투자법(CRA)은 특정지역 예금수취 금융기관의 지역 내 대출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의무화한 제도. 특히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 대출수요 대응을 중시
- 연준(FRS),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및 저축기관감독청(OTS) 등의 주요 금융감독기관은 별도의 지역재투자법 관련 규정을 시행 중이며, 이는 지역재투자법(CRA, 12 USC 2901)에 근거함

-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 저축은행 등 예금수취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지역재투자법의 적용 대상으로 지역 내 대출수요 대응이 의무
- 한편 비소매금융 특수목적 금융기관, 독립 모기지 회사, 신용조합 등은 지역 재투자법 제외 대상으로 분류됨
-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역별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다양한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금융에 관한 정책적 지원 요구가 확대
-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법에 근거하여 1995년 연방정부 재정으로 재무부가 관할하는 CDFI 기금이 조성
- CDFI 기금은 저소득지역, 일자리 감소 지역, 낙후주거 지역 등의 지역 개발을 간접 지원하며, 대출 및 투자는 CDFI 기금에서 인증받은 CDFI를 통해 이루어짐
- CDFI 투자액의 일부는 은행의 BEA(Bank Enterprise Award) 프로그램을 통해 보전되며, 지방정부는 세제지원(NMTC: New Market Tax Credit)을 통해 CDFI의 투자사업 일부를 지원

<그림 16>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구조



※ 여호성·김봉균(2020)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기금 운영은 각 CDFI 간의 엄격한 경쟁을 기본으로 하며, 각 지역의 CDFI는 지역 금융지원 방식 및 민간자금 매칭방안 등의 계획안을 만든 후 CDFI 기금 프로그램에 응모
- 기관 간 경쟁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금운영은 지역개발 사업의 적절한 투자이윤 유지를 유도하고 기금고갈을 예방, 또한 해당방식은 기금투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유인하는 장점을 가짐
- 감독기관은 CDFI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1) 대출 2) 투자 3) 서비스 3개 부문에 걸쳐 평가
- 지역대출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농민관련 대출, 저소득층 관련 혁신적인 대출, 소비자금융의 취급 실적, 지역 내 모기지 대출, 대출의 지역 내 분산정도 및 탄력성 등에 관해 실행의 척도를 구분하여 평가
-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혁신, 대출수요 신속대응여부, 적격투자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적격투자는 지역개발에 관해 시급하고 우선시 되는 합법적 투자 및 지분참여 투융자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격여부를 평가

<표 9> CRA 관련 주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구체적 평가기준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개발 대출 실적</li> <li>- 지역내 모기지 대출, 소기업 및 소농대출, 소비자 금융의 취급실적</li> <li>- 상기대출이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지역 내 분산 정도</li> <li>- 소득계층별 1) 주택모기지 취급실적</li> <li>- 연 수익 1백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 및 소농에 대한 대출실적</li> <li>- 최하위 및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혁신적, 탄력적 대출실행 여부</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투자의 실적 및 혁신정도</li> <li>-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적격투자의 신속한 실행 여부</li> </ul>
서비스	(소매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지역별 지점의 분산 정도</li> <li>- 최하위 및 하위 계층 거주지역의 지점 개설 및 폐쇄사례</li> <li>- 최하위 및 하위 계층 거주 지역에서의 ATM, 텔레뱅킹 등 이용가능성 (지역사회개발)</li> <li>-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혁신성 및 신속성 정도</li> </ul>

※ 주 : 개인소득(또는 가계소득)이 해당지역 중위 개인소득(또는 가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최하위, 50-80%는 하위, 80-120%는 중위, 120% 이상은 상위 소득계층으로 구분

※ 자료 : CRA

-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지역사회의 급속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CDFI는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활력제고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음
-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대규모 주택 압류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 전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저소득층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혁신이 진행
- CDFI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공금융정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지역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필요한 금융수요를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해소함으로써, 지역침체문제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2) 영국의 빅소사이어티 캐피털

- ▣ 빅소사이어티 캐피털(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은 지역 내의 다양한 침체상황 및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협력하는 금융지원정책
- 영국에서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정부를 중심으로 시작 되었으며, 2008년 기금관련 법안이 도입되고 성장을 거듭하여 25억 파운드 (약 2조 5,000억) 규모의 사회투자 시장을 형성
- ▣ 영국 또한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권역과 비수도권 권역간의 지역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도시침체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산업화 및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경우 금융취약계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과거부터 존재
- 이에 영국은 정치영역에서 '사회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TF'를 2000년에 구성하면서, 지역격차 문제 및 소외계층 투자 사업 기금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
- BSC는 2008년 '휴면예금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노동당 정부는 7,500만 파운드 규모의 기초기금을 휴면예금을 기반으로 조성해 사회투자은행의 설립

-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뀐 후, 보수당은 BSC의 규모를 6억 파운드로 확대,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목적 투자에 금융을 지원
  - 보수당은 2012년 휴면예금 계좌 4억 파운드 및 민간은행 4곳의 2억 파운드 투자를 받아 기금을 확대
- BSC 기금은 공공영역과 민간자금의 매칭을 전제로 각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주체를 사회적금융중개기관(SIFs: 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해 간접지원하며, 지역 내 사회적 시장생태계 구축 기능을 수행
- BSC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형태의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
- BSC의 원칙은 장기에 걸쳐 지역 내의 사회투자 시장의 조성을 유도하는 ‘안내자본’으로써의 목적에 부합
- 이러한 금융중개조직으로써의 역할은 지역개발시장 및 사회적 투자 시장이 단기수익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함
- BSC의 간접 금융지원은 지역 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재정지원을 하던 공공의 역할에서 벗어나 투자와 용자를 통해 해당 지역 내 기업환경과 시장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림 17> BSC 구조



※ (재)한국사회투자

### 3) 일본의 지역공익사업 금융지원

■ 2016년 일본은 지속적인 지방침체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휴면예금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공익목적 사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모색

● 휴면예금\*을 사회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6년 12월 「민간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휴면예금 등에 관한 자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

\*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의 예금 등에서 입출금, 잔고확인 등 법령에서 규정된 이동(異動)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예금 등을 의미

● 휴면예금 활용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민간에 의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

● 일본의 경우 지역침체, 빈집증가, 인구급감, 초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국민 생활의 질과 수준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직면함에 따라 수많은 지역별 과제가 누적

● 이러한 지역별 과제 중 기존 행정수단으로 대응이 곤란한 과제는 공익목적 기업 및 단체가 문제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자금 및 금융지원이 부족해 그 성과가 미미

■ 2019년 하반기부터 해당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업 금융 지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1)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들의 휴면예금을 이관받아 지정활용단체에 자금을 교부

● 2) 지정활용단체는 자금배분단체의 조정 및 사업계획의 책정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고 감독하며 자금배분단체에 대출을 지원

● 3) 내각부는 지역침체문제에 대응하는 기본방침 및 계획의 방향성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의 인가는 심의회를 통해 감독 및 자문

● 4) 지정활용단체는 자금배분단체를 선정하고, 자금배분단체는 현장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 및 공익목적 비영리 단체에 출자 및 대출을 진행

<그림 18> 일본 지역공익사업 금융지원 구조



※ 여호성·김봉균(2020)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 협동조합 방식 지역개발 금융

- ▣ 서구의 경우 오래된 협동조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전해 왔음
- ▣ 스페인과 캐나다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거대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지역개발 및 지역 내 금융기관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1) 캐나다의 뱅시티와 데자르뎡

- ▣ (뱅크티) 밴쿠버 신용협동조합(Vancity: Vancouver City Savings Credit Union, 이하 뱅시티), 뱅시티는 캐나다에서 영어권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신용협동조합
-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은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관계형 금융기관들이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이들 금융기관들은 관계형 금융을 지역사회에 밀착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ATM 기술 보급 등 기술혁신 또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
- 1946년 밴쿠버 지역의 영세 지역민들을 위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출발한 뱅시티는 현재 약 53만 명의 조합원과 26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금융기관으로 발전
- 뱅시티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한 채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협동조합의 1인 1표제 의사결정구조 및 조합원 이익공유제를 유지
- 뱅시티는 지역 내 서민 가게 및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소액대출 등의 대출사업뿐 아니라 창업지원 등의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
- 뱅시티는 저신용 무담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을 경영상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조합원 간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

- (데자르덴) 데자르덴은 프랑스어 권역인 캐나다 퀘벡주 기반 신용협동조합이자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협동조합으로 자산규모 2,480억 캐나다달러(약 225조 8천억)에 달하는 거대금융기관
- 퀘벡주는 인구의 2/3 가량이 다양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일 정도로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이 다른 지역보다 지역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자리잡아왔음
- 이러한 지역적 특성 하에 데자르덴은 가톨릭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거대금융그룹으로 성장
- 데자르덴의 성장계기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지역금융 운동으로, 상호부조 정신 하에 경제위기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어 조합이 크게 성장
  - 1979년부터는 연대저축 기금을 통해 도시 및 농촌을 아우르는 대형금융기관으로 발돋움
- 보험, 펀드, 산업금융을 취급하는 거대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데자르덴은 현재도 산하의 지역금융을 통해 지역 내 서민 대상의 소액금융에 집중하고 있음
- 한편 지역 내 영세 가게 및 기업을 위한 재무상담, 재무교육 등에도 역량을 확대 중이며, 지역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

&lt;표 10&gt; 데자르덴 개요

장점	설명
인적개발을 위한 화폐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는 인민과 공동체의 발전과 자립을 위한 수단</li> </ul>
인간에 대한 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근로자 경영자 모두 협동조합을 통해 상부상조</li> </ul>
민주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은 1인 1표의 원칙하에 의사결정 참여</li> <li>• 참여는 데자르덴의 핵심가치</li> </ul>
진실성과 철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고객 파트너와의 신뢰유지</li> <li>• 정직성 객관성 능률성 투명성 법규의 준수</li> </ul>
지역사회와의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발에 적극 참여</li> <li>• 지역사회와 공동체와의 상호협조 및 이해에 기반하여 사업추진</li> </ul>
상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과 조합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통합함</li> <li>•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함</li> </ul>

※ 자료 : 데자르덴 홈페이지

## 2) 스페인의 라보랄 쿠차

- ▣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대표적 지역중심 금융기관으로 해당지역의 대규모 협동조합 복합체인 '몬드라곤(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을 금융측면에서 지원
- 전통적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이 활성화된 스페인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 복합체로 꼽히는 '몬드라곤'은 1950년대 바스크의 소규모 협동조합 운동을 기반으로 시작
  - 1956년 5명의 소규모 협동조합 사업체를 기원으로 하는 몬드라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스페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으로 성장
- 몬드라곤은 약 70년에 걸쳐 산업, 유통, 금융, 지식 분야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102개의 협동조합 및 140개의 자회사를 갖춘 대규모 복합체로 성장
  - 2020년 기준 73,6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12,000만 유로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공적 협동조합 복합체
- 라보랄 쿠차는 대규모의 관계형 금융기관으로 몬드라곤을 금융차원에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몬드라곤이 협동조합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
- 라보랄 쿠차와 몬드라곤은 오랜 역사에도 조합원이 회사를 공동소유하고 경영자를 선임하는 초창기 지배구조를 원형대로 유지
- ▣ 라보랄 쿠차는 다종다양한 협동조합 조직체인 몬드라곤의 자금 공급 뿐 아니라 조직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간의 협력적 관계에 기초
- 라보랄 쿠차의 전신은 호세마리아 신부에 의해 설립된 '노동인민금고'로 초창기에는 지역협동조합의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노동인민금고는 '연합협정' 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방식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산하의 협동조합들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정책 구조를 규정하고 조율

- ▣ 다수의 협동조합이 연합한 몬드라곤에 통일성과 연대성을 부여하는데 노동인민금고가 금융을 통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

  - 이는 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협동조합과 신용조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
  
- ▣ 1970년대 스페인의 경제 불황 당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노동인민금고는 금고 내의 기업국을 통해 몬드라곤 산하 조합 간 합병 분할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수행

  - 노동인민금고는 상호협력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거대 조직체인 몬드라곤의 경영효율제고의 핵심적 조정을 담당
  - 국제노동기구(ILO)는 몬드라곤과 라보랄 쿠차의 사례를 협동조합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시중은행보다 지역경제의 위기에 있어 위기대처 및 회복 측면에서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례로 평가(Birchall, 2013)
  
- ▣ 2012년 노동인민금고는 'Ipar Kutxa'와 합병을 거쳐 현재 라보랄 쿠차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약 220억 유로 이상의 총자산을 보유한 스페인 5대 은행으로 성장

  - 거대금융기관으로 성장한 현재에도 라보랄 쿠차는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인터넷 뱅킹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외연을 확대
  - 또한 지역밀착 관계형 금융으로써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등 기존의 금융 및 컨설팅 지원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

###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 금융

-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지자체 주도로 지역개발 공공은행을 설립하여 낙후지역의 다양한 대출수요 및 금융수요를 지원

#### 1) 지역개발 공공은행 미국 노스다코타

- ▣ 노스다코타 은행(Bank of North Dakota, 이하 BND)은 미국의 지역은행으로 지역특화 공공은행의 모범으로 꼽히는 대표적 사례
- BND는 노스다코타 지역의 ‘상업, 농업 및 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100년 전인 1919년 주민투표를 거쳐 주 예산 2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설립
- ▣ BND는 노스다코타 주의 지역중앙은행(지역은행의 대부자) 및 지역개발 은행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은행과 지역기업을 지원
- BND는 소규모 지역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지점이 두지 않고 본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도매금융서비스를 제공
- BND는 주정부의 세금 및 수수료를 모집한 것을 기본적 자금 기반으로 학생대출, 기업대출, 주택자금대출, 농업대출 등 4개 영역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진행
- 노스다코타 주 정부의 세입은 BND 예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
- ▣ BND는 지역 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학생대출, 대학재정 지원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출프로그램 운영을 지역금융기관과 협력 하에 진행
- BND는 지역 기반 재원을 이용하는 만큼 은행수입의 일부를 노스다코타 주정부 일반기금에 환원하고 있음

- BND는 장기간에 걸친 지역 커뮤니티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
  - 현재 BND는 총자산이 7,3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며, 연간수입은 136백만달러 수준이며 파트너십을 가진 금융기관이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성장
- BND는 현재에도 지역 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지속
  - 다른 시중 은행들은 수익률 확대를 위해 안전자산에 대한 보유성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BND는 지역중심 영업 경향을 중심으로 하는 설립취지를 유지
- 금융위기 당시 BND는 지역 중심으로 오히려 대출규모를 증대하였으며, 이는 BND가 지역경제 금융지원에 가지고 있는 저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그림 19> 노스다코타 은행 자금 기반



※ 자료: BND 홈페이지(www.bnd.nd.gov)

## 2) 캐나다의 지역금융기관 MFA

- ▣ 캐나다의 MFA(Municipal Finance Authority of British Columbia)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역개발 금융기관
- MFA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집단대출 기관으로 지역정부 발전을 위해 1970년에 설립
  -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캐나다에서 태평양에 인접한 동부의 주로 인구는 500만, 면적은 한반도의 약 9배 수준, 언어는 주로 영어를 사용

- MFA는 지역 내 지방정부, 공공기관, 커뮤니티 등에게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및 투자 매니지먼트, 장단기 대출, 자본임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
- 또한, MFA는 침체지역의 문제완화를 위해 지역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장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을 지원
- ▣ MFA의 소유주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이며, 지역 내 지방정부의 장기자본 대출실행은 MFA를 통해 진행
- MFA에 대출을 받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산하 지방정부들은 부채를 상호적 연대보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설립초기 주정부의 조세를 기반으로 재원을 조달하던 MFA는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현재는 은행예산 45%를 자체영업으로 충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
- ▣ MFA는 지역침체에 대응해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재정지원 사업 등 지역 친화적 사업 또한 확장 중
- MFA는 공무원 금융교육, 중소기업 워크숍 지원 등 지역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

#### 4. 해외사례의 특징 및 장단점

##### ▣ 해외사례를 참고해 볼 때, 중앙정부·지방정부 주도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방식 금융기관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

- 1) 지역발전에 영합하는 영업활동 : 설립목적에 맞게 공동체적 가치나 사회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 및 개인을 중심으로 자금을 활용
- 2) 금융자금의 생산적 목적에 활용 : 지역 개발금융기관들은 안전자산 축적이나 투기목적 자산 투자보다는 지역의 생산 활동에 자금을 투자
- 3) 관계형 금융 특화인력과 노하우 보유 :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과 캐나다의 MFA의 경우 지방공공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타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 이로 인해 인력과 노하우가 축적

##### ▣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들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방식의 중앙집권적 금융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금융서비스 및 정책금융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금융 2) 협동조합방식 지역개발 금융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으로 분류되는 해외사례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금융

- ▣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재투자 금융정책은 지방침체에 관해 양면적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것이 단점
- 장점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재투자 금융정책은 지역 개발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며, 지역금융과 더불어 양면적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
- 진행이 결정될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기금설정 및 침체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
  -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외부자금이 상호협력적 형태로 제공될 경우, 지역격차 문제에 관한 자금에 양면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 단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의 규모 및 집행과정에 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이 단점
  - 미, 일, 영과 같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금융지원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슈 및 지원 금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이슈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예상

## 2) 지역자생적 신용협동조합

- ▣ 유럽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자생적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에 밀착된 금융지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협동조합금융의 형태로 자리 잡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
- 장점 : 지역 내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신용협동조합은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지역위기에 공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공동체의 결속유지 및 연대감 형성 등에 있어 선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점
- 단점 : 유럽의 경우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어 지역침체 문제에 대응한

### 금융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발달

- 지역자생적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종교적, 사회적 이념 하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역침체 문제가 시급한 우리나라의 경우 참고하기 어려움
- 캐나다의 뱅시티나 스페인의 라보랄 쿠차 사례에서 보듯 지역자생적 신용협동조합은 약 50~100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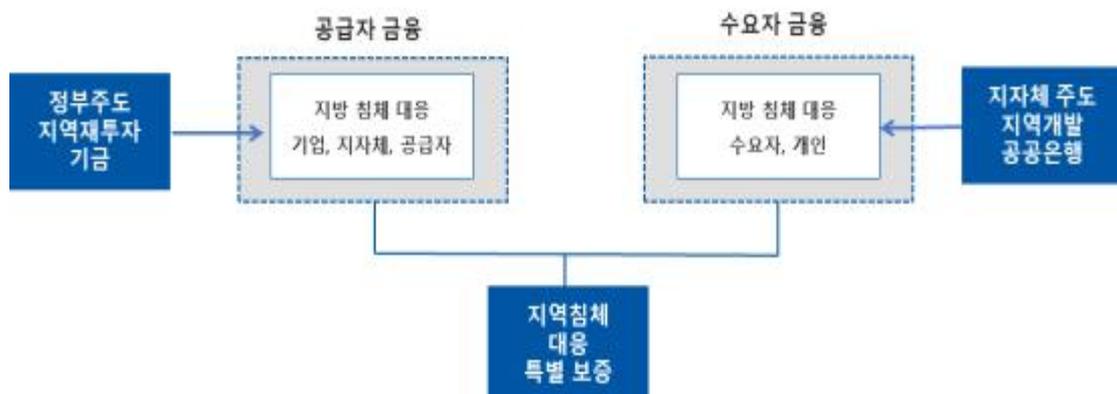
###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

-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의 경우 지역 내 금융수요의 효율적 충당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전문 인력 부족 및 추가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단점
- 장점 : 지방침체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은행의 정책지원과 연결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또한 지역침체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에 있어 지역은행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내 자금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단점 :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 내 금융지원 및 본격적인 자금집행에 따른 사업경험이 적은 것이 현실.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 및 그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등이 필요한 것이 단점
- 전문적인 경영·재무 컨설팅을 수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인력의 유치 및 다양하고 추가적 지원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역금융기관은 다양한 협력업체와 조합원 그리고 고객과의 긴밀한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

## V. 지방침체에 대응한 공공금융정책

-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금융지원방안이 필요
- ▣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식은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금융' 및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침체 대응 특별보증' 이 필요
- 한국의 경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 지역 경제후퇴, 도시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유럽과 같은 신용협동조합 형태의 자생적 지역 금융기관 형성을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지역 침체 및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인 관계형 금융, 포용적 금융의 방식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정부주도와 민간이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
  - 지역의 자금이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지역기반 창업 및 기업유치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음
-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재투자 기금과 지역개발은행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 및 정책을 공공부문의 신용공여를 통해 보증할 경우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기대

<그림 20> 지방침체문제에 대응한 공공정책금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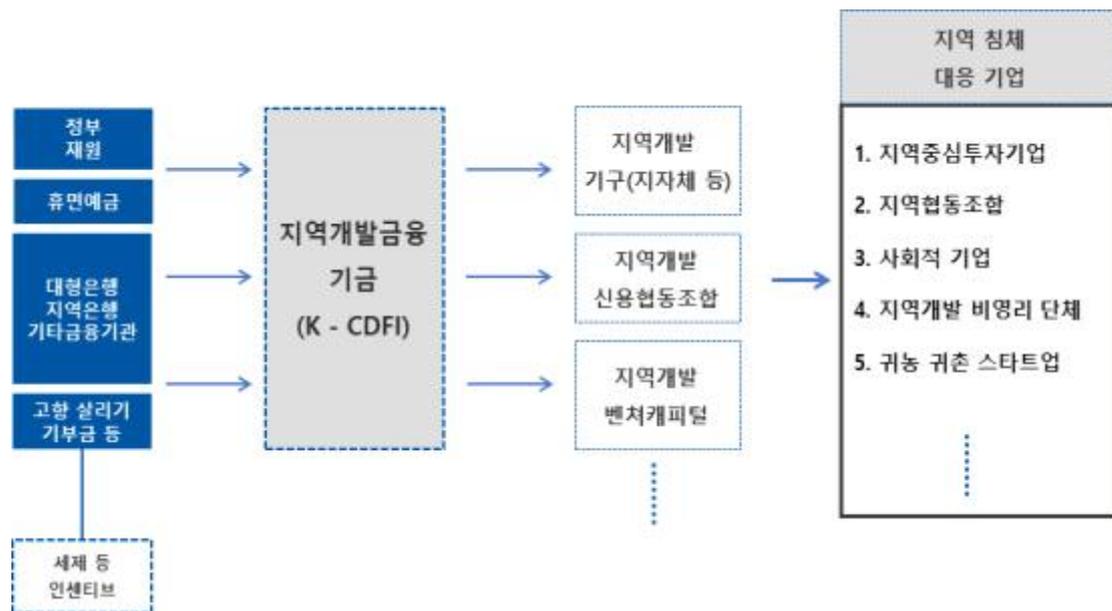
※ 자료: 저자 작성

##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기금

- ▣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침체상황에서 보듯 현재의 제도권 금융만으로는 심각한 지역격차 문제의 해소가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예금수취지역의 투자 및 용자보다는 안전자산 및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어 지역에서 수취된 예금자원이 지역 내 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큼
- ▣ 따라서 미국, 영국 및 일본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지방침체 완화를 위해 지역재투자 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부주도의 지역 재투자 기금은 지역침체에 대응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일종의 공급자 금융 지원을 담당
- 또한 지역 내 낙후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개선, 공공주도 도시정비 등의 사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함
- ▣ 정부 주도 지역 재투자 기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침체문제 완화를 목표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하에 양면적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
- 1990년대 중반 美 클린턴 정부의 ‘커뮤니티 개발금융기관(CDFI)’ 정책 또한 이러한 양면적 지원을 통해 지역격차의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
- 해당제도의 시행으로 14년간 총 380억 달러 이상의 민간 재원이 CDFI로 유입
- 미 재무부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마중물 투자와 지역개발금융이 연결되면서 투자금액 대비 약 20배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마을 단위 조합과 주요 은행, 정부를 포함해 미국 내 1,00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이 펀드는 정부 출연금만 1,000억 달러(약 119조원) 수준으로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하나의 거대한 정부주도 공공 펀드가 대신

- ▣ 정부주도의 지역재투자 기금은 **재원마련→자금배분→자금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해외사례와 같이 지역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해 금융지원의 효과 및 기금 수익성을 유지
- (재원마련) 미·영·일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주도 지역 재투자기금은 정부 재원 뿐 아니라 휴면예금, 시중은행 투자 그리고 세제혜택 부여가 가능한 기부금을 기반으로 기금형성이 가능
- (자금배분) 자금배분은 지역발전 방향성에 관한 기획 및 실행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자금을 지역개발 은행 혹은 지역개발 벤처캐피털 등으로 배분하고 진행 및 결과를 모니터링
- (자금집행) 각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개발은행 및 지방정부의 공급자금융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또한 지역 내 지역밀착형 기업 및 지역 협동조합, 각종 스타트업 기업 등에 금융을 지원

<그림 21> 정부주도 지역개발기금과 금융지원



※ 자료: 저자 작성

## 2.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

- ▣ 지역경제침체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도시재정비, 지역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은행이 필요
- 지방침체문제 대응 정책 중 첫 번째로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유치가 중요
- 인구유출의 지속적 진행은 극심한 지역 경기의 후퇴를 불러오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역 경기가 후퇴할 경우 대응이 어려움
- 또한 새로운 인구유입, 출산율 상승을 위해 교육 및 도시 인프라 개발을 포괄하는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
- ▣ 지자체주도의 지역개발은행은 지역 내의 도시문제 관련정책 및 기업 생태계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수요를 지원
- 지역 내에는 지역민 대출 및 지역중소기업 및 침체 대응 사회적 기업, 농상공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경제주체 들의 투자 및 용자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그 내용 또한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지역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자금 투자 및 용자 수요
  - 극장·커뮤니티 센터·직업훈련학교·복지시설·도서관 설립 수요
  - 지역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낙후된 수도 및 하수도 처리시설 정비 자금 수요
  - 영세 농업인 영업지속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 수요
- ▣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은 지방정부의 수수료 및 세금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수요자 금융을 담당하고 지역침체에 대응
- 지역개발은행은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수수료 및 세금을 기반으로 설립
- 또한 지역의 다양한 기부금 자원 및 예금을 모집해 지역 내 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은행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지역기반 시설, 도시재생 등과 지역 내 단체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지방정부의 자금수요에 대응
- 지역개발은행은 지역 내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학생, 농업인,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수요자 금융을 지원

<그림 22> 지역개발 공공은행 금융지원



※ 자료: 저자 작성

- ▣ 지자체주도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등 경제주체가 포함된 지역경제 생태계와 공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
- 지역 공동체가 지지하는 공동체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는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주체들과 지역개발금융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 중요
  - 이를 위해서 환경, 생태, 노동, 인권, 참여민주주의 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자선·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활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전문가의 조언과 현지 거주자의 아이디어가 결합해야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

- 예를 들어 침체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집적시설(문화시설,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마련할 경우, 민간과 공공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주체의 협력이 필요
- ▣ **향후 금융기관과 지역공동체의 연계성이 밀착되면 일자리 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낙후 도시 지역, 빈곤 지역을 상대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정책 및 금융지원이 가능**
-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도 기관 및 지역사회간의 연계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
- 이러한 신뢰 및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전문적인 창업·경영·재무·경영기획 컨설팅을 수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 또한 중요함

### 3. 지역침체 대응 특별 공공보증

- ▣ 미국의 경우 지역개발금융과 지역 재투자기금의 양면적 지원에 있어 보증 및 세제혜택을 통해 정책의 진행을 촉진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지방침체문제를 해결
- 미국 켄터키 주의 경우 1970년대 극심한 지역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적극적인 지역 투자정책 및 중앙정부의 CDFI 기금 지원이 연결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프라 개선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둠
  - 켄터키주는 새로운 일자리 약 2만 5,000개가 창출되면서 빈곤 및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고, 811개가 넘는 기업이 설립
  - 양면적 금융지원에 힘입어 켄터키주의 교육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 인프라 자원 또한 크게 확충됨에 따라 유출인구가 감소
- 미국은 한정된 정부재원의 효율 확대를 위해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보증 및 세제 혜택 부여
  - 미국 연방 정부의 경우 다양한 보증기관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에 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7년간 투자 총액의 39%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부여
- ▣ 우리나라 또한 지역침체 대응정책에 관련된 지자체 및 경제주체를 위해 공공차원에서 보증을 제공해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이 지역침체 사업에 공적보증을 제공할 경우, 지역경제 및 도심 재정비 사업 전반에 걸친 자금조달 비용의 경감이 가능
  - 지역침체에 대한 대응은 지역기업참여 부문과 지역민(협동조합 등) 참여부문, 지방정부 정책 부문으로 구분되나 각 부문 모두 수익성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크고, 금융 접근성 또한 떨어짐
- 지방침체 관련 사업 및 정책의 리스크 일부를 공공이 금융차원에서 분산하여 부담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발한 활동 및 참여 확대를 유도

## VI. 결론

- ▣ 지방침체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다른 이름으로 인구감소 가속화의 큰 축으로 작용하며, 지방침체문제 자체가 더욱 강력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출발점
- 지방침체문제는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이며, 1) 지방 청년인구 유출, 2) 수도권의 심각한 저출산, 3) 지방 소멸 가속화라는 ‘전반적 인구감소 악순환’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 지방침체가 복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나, 자금의 확보 및 금융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지역침체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노후화, 노령인구의 증가, 일자리 감소 및 육아환경 악화 그리고 빈집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 중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아 지역침체 문제에 관한 대응방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형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 특히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낙후지역의 도시 인프라 재건 및 주거환경 보완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을 위한 다양한 공공금융정책이 필요
- ▣ 본 연구는 지방침체 대응을 위해 1) 정부주도형 지역재투자 금융, 2) 지자체 주도 지역공공개발은행, 3) 지역침체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 우리나라의 인구·주택·도시 측면의 지방침체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신속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침체에 대응하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금융정책 방안이 필요

- ▣ 또한 지역침체 대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금융정책 외에도, 시장 참여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지원 및 정책지원이 필요
- 공적기관의 경우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침체대응 경험을 통해 지역맞춤형 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사업방향 설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에서 정책진행의 컨설팅 및 효율적 자금집행 방안, 사업아이디어의 구체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적 조언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표 11> 지방침체 문제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및 정책지원 방안

정책방안	지원내용
1. (금융) 정부주도형 지역재투자 금융지원	• 공급자 측면의 금융을 지원
2. (금융) 지자체 주도 지역공공개발은행	• 수요자 측면의 금융을 지원
3. (금융) 지역침체 특별보증	• 사업 전반에 걸친 공공보증 공급
4. (정책지원) 다양한 정책적 지원	• 컨설팅, 연구기관, 정책조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 ▣ 해외의 지역개발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역개발 컨설팅 및 연구를 진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침체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
- 몬드라곤과 같은 신용협동조합 뿐 아니라 뱅시티 및 노스타코타 은행과 같은 지역개발은행은 다양한 지역개발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 지방침체문제는 장기적 해결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전문노하우를 가진 인력의 축적 및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개발이 중요
-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하는 금융 지원과 더불어 공공특별보증과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공급될 경우, 지역 경제주체들의 참여 촉진 및 혁신적 지방침체 대응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 참 고 문 헌

1. 지방행정연구원. (2018). 「지역재투자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연구」
2. 국제노동기구. (2013). 「경제위기와 협동조합의 회복력: 금융협동조합의 저력」
3. 강다연. (2019). 「정부역할에 따른 협동조합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경제연구소.
4. 이병윤·이순호. (2017).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5. 이재연 외. (2012). 「상호금융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6. 여호성·김봉균(2020).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 정찬우. (2010).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8. 류덕위. (2011). 금융양극화와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제고. 「신탁연구」, 57(1): 3-39.
9. 김경수·김상미(2021).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경제현안분석 제 100호, 국회예산정책처
10. 김국현(20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방안: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지역개발연구, 44(2) : 25-40.
11. 김은경·김지혜(2017).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12. 김정훈·이다겸(2016). 지역 간 불균형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산업구조 차이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13. 노진호·최현우(2010).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주요 해외사례 및 시사점”, 금융산업,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4. 민병길·이상민(2015).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경기연구원
15. 민병길 외(2017), 지역금융 현황 및 지역금융 발전방안 모색, 경기연구원
16. 여호성·김봉균(2020).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 고 문 헌

정연구원.

17. 장종익·박종현. (2013).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사회경제평론」, 40: 123-159.
18. 주성수. (201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19. 최진배. (2009). 「지역금융활성화와 신용협동조합의 과제」. 「산업혁신연구」, 25(3): 101-136
20. Nicholls, Alex, and Jed Emerson. (2015). Social Finance: Capitalizing Social Impact. Social Finance (Edited by Alex Nicholls, Pob Paton, and Jed Emers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41.
21. Rizzi, Francesco, Chiara Pellegrini, and Massimo Battaglia. (2018). The structuring of social finance: Emerging approaches for supporting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impactful project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0: 805-817.
22. Rosenman, Emily. (2019). The geographies of social finance: Poverty regulation through the 'invisible heart' of marke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3(1) : 141-162.
23.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 (2014). Impact Investment: The Invisible Heart of Markets.
24. 노스다코타 은행([www.bnd.nd.gov](http://www.bnd.nd.gov))
25. CDFI 기금([www.cdfifund.gov](http://www.cdfifund.gov))
26. 데자르댕([www.desjardins.com](http://www.desjardins.com))
27. 밴시티([www.vancity.com](http://www.vancity.com))
28.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9.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